



16일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일대 논에서 친환경 약제를 뿌린 뒤 붉게 변해 버린 나락을 농민이 살펴보고 있다. 농민을 중심으로 사진 위쪽 친환경 약제를 살포한 논의 나락은 붉게 변했고, 일반 약제를 쓴 아래 논에서는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다.

/고흥=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빨갛게 탄 벼...까맣게 탄 농심

‘친환경의 역습’ 해남 풀무치떼 습격 이어 고흥 풍양면 일대 논 3만평 병충해

약제 사용법·안전성 논란

전남지역 내 전체 논 면적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친환경 논에서 잇따라 대규모 병충해와 곤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서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친환경 논 면적은 갈수록 늘고 있으나 친환경 약제의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못한데다 농민들조차 살포 시기 및 방식 등 사용법에 익숙하지 못해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와 함께 잦은 가을비 등 이상기후로 인해 벼 도열병 등 병충해가 자주 출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친환경 약제가 ‘예방 기능’만 하게 돼 있어 방제당국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16일 고흥군 풍양면 안동리 일대 3만평의 친환경 논에서 세균성 잎마름병, 벼 도열병 등의 병충해가 발생해 벼가 붉게 변하자 농민들과 제조사 관계자가 현장에서



지난달 28일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일대 농경지를 습격한 풀무치떼.

조사를 벌였다.

피해 농민들은 친환경 약제를 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충해가 발생했다며 약제 제조업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제조업체 측은 종자 소독 부실, 약제 살포 미흡, 잦은 가을비 등이 원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농민 김근호(41)씨는 “친환경 약제를 살포하지 않은 논은 깨끗한데 약제를 살포한 곳에서 병충해가 발생했다”며 “약제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조업체 관계자는 “벼멸구, 벼도열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고흥군 8개면 450ha에 같은 약제를 살포했는데, 이번엔 문제가 된 것은 극히 일부”라며 “최근 잦은 가을비에 약제를 수차례 살포해야 하

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일반농약은 한 번 살포 후 약제 잔류기간이 40일이지만 친환경 약제의 경우 그 3분의1 수준에 불과해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살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8월28일 해남군 산이면 덕호리 일대 농경지와 주변 20ha에서 대량 발생한 풀무치떼도 잦은 가을비 등 이상기후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전남도 등은 주변 지역 60ha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도내 업체가 생산한 친환경 약제로 방제에 나서 풀무치를 퇴치했으며 오는 22일 역학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일반농약을 사용하면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이 취소될 수밖에 없어 친환경 약제 효과가 없었다면 자칫 방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내 친환경 및 유기농 인증 논은 4만6000ha로, 전체 논 면적(6만8000ha)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친환경 및 유기농 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면적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약제, 농법 등에 대한 연구 및 홍보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친환경 약제가 목초액, 식물추출액, 미생물 등으로 조제되기 때문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안전성이나 부작용, 그리고 성능에 대해서 검증이 제대로 안 된 측면이 있다”며 “이상기후 등으로 인해 병충해가 자주 출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가진 친환경 약제 개발과 토양을 건강하게 하는 농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열려라 취업문

광주, 취업박람회 잇따라 개최 ▶8면

컬처 & 피플

장하준 영국 게임브리지대 교수 ▶17면

朴 “세월호법 대통령 결단 사안 아니다”

유족 “대통령 발언 국민 뜻 무시” 반발

정의장, 의사일정 직권 결정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16일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특별위에 수사권 및 기소권을 부여하라는 유가족과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 “그것은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이러한 근본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체계는 무너질 것이고 대한민국의 근간도 무너져 끝없는 반목과 갈등만이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야당과 유가족의 요청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함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뿐 아니라 민생법안의 장기표류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다.

이날 박 대통령은 “세월호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저는 지금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의 지난 12일 박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그도를 넘고 있다”며 “이는 국민에 대한 모독과 외교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이 삼권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힌 것은 결국 그동안 진행해온 국회와 가족대책위 사이의 논의를 무시하고 2차 합의안으로 끝을 내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가족대책위는 또 “유가족들이 단 한번도 과도한 배상이나 보상을 바란 적이 없는데도 여당과 대통령이 거듭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며 “돈으로 세월호 참사를 덮어버리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날 직권 결정했다. <관련기사 4면>

그러나 이에 새정치연합은 반발하고 있어 정기국회는 앞으로도 당분간 파행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갬코 106억 사기 당했다” 인정

“실익 없다” 국제소송 종결

광주시가 3D(3차원 입체영상 변환)버팅 한·미합작투자법인 갬코(GAM+CO) 건과 관련해 현재 106억원을 (국제적으로)사기 당했다고 공식 인정했다. 시는 투자액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에서 승소해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 종결에 합의했다. <관련기사 3면>

이런 광주시 문화관광정책실장은 16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출자한 광주문화컨텐츠투자법인(GCIC)이 미국 측 파트너 K2AM을 상대로 낸 ‘로스앤젤레스(LA)기술테스트’ 반환 소송에 대해 최근 K2AM 측과의 조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잘못된 정책판단으로 결국 국 사기를 당했다”고 공식 표명했다.

광주시가 국제사기로 공식 인정함에 따라 전임 강운태 광주시장과 관련 공무원들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는 미국측 파트너 기업인 K2AM과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연방법원·싱가포르 중재센터 등에서 에스크로 계약조 송금된 70만달러에 대한 반환 소송과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 920만달러 청구 소송 등을 준비해 왔으며, 최근 39만여 달러를 분할받으라는 미국 법원의 조정 판결 내용에 합의했다.

이런 실장은 “106억원의 손실을 빚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전임 시장 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한 책임 부분은 현재 진행중인 GCIC 관련자의 형사 재판 이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5신입생 모집
수시모집 2014. 9. 6(토)~9.18(목)
입학문의 062)605-1114, 1027
광신대학교

아이낳기 좋은 전남

아기 탄생의 울음소리
대한민국 희망의
고동 소리입니다.

전라남도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위해 도와 시군이 한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